

學生運動과 統一論議

林 榮 一
(慶南大 社會學科)

1. 學生運動과 民族主義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근대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民族主義는 단순한 저항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립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자립적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 속에서 근대적인 민족 국가, 국민 국가의 전설을 이를 수 있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주의적이고 편협한 계급 이기적인 반동적 이념이 아니라, 대단히 力動的이고 進步的인 解放의 理念으로 역할해 왔다. 흔히 서구적 관점에 입각하여 민족주의 일반을 보수적이고 특수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이데올로기로 치부하고 그것을 경계하기도 하나, 이는 보편주의를 앞세운 서구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반영일 뿐이다. 전후 제3세계에서의 社會運動은 그것의 정치 이념적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경우에든 항상 민족주의에 의해 촉동되었고 이는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대단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學生運動 역시 그것이 특정의 시기나 국면에 있어 어떠한 정치 이념과 친화력을 가지고 결합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민족주의의 이념과 에너르기를 가장

핵심적인 추동력으로 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기 民族共同體의 단일한 국가 구성을 장구한 역사 시기 동안 유지해 왔던 우리 사회는 제국주의의 침탈과 더불어 시작된 고난에 찬 근대사의 모든 기간을 해방된近代的인 國民國家의 建設을 위해 참으로 처절한 투쟁과 희생으로 채워 왔지만, 지금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未完의 課題로 남아 있다. 오늘날 이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分斷 克服'으로서의 民族統一의 과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따라서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모순 구조 속에서 배태되고 증폭되어 가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한 중요한 갈래로서의 한국의 학생 운동이 그것의 전개 과정에서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이르러 항상이 과제의 해소를 전년적인 당면의 실천 과제로 제기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80년대 들어 급속히 변화해 온 한국의 학생 운동은 '80년대말에 접어들면서 점차 民族統一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實踐運動의 과제로 설정해 왔고, 分斷狀況 속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조건들을 打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들이켜 보면 그 속에는 학생 운동이 지니게 마련인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사고의 혼적이나, 일반 대중의 정서와는 유리된 급진적인 실천의 시행착오 역시 넘쳐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경직된 ‘分斷意識’ 혹은 ‘反共意識’의矯正에 그것이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학생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와 시작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未完의歷史的課題로서의統一된民族國家,近代的國民國家의自主的建設이라고 하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적 과제의 연장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80년대의 學生運動과 社會認識의 變化

는자에 따라 평가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의進步的社會運動은 해방에 뒤이은 민족 구성원 내부의 치열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외세의 규정력 하에서 진행된 파멸적인 전쟁의 결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전반적인 역사적 단절의 시기를 경험하였다. 학생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는 4·19와 그 이후 시기의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실천 운동상의 한계를 지적할 때 바로 이런 점에서의 그것의 이념적 소박성과 낭만성, 그리고 대중적 기반 위에 서지 못한 팬데믹 급진성을 지적하곤 한다.

'80년대의 學生運動은 이런 점에서 보면 물론 그 역시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지만, 과거의 학생 운동과는 대단히 다른 면모를 보여 왔다. 몇 가지 중요한 측면만 지적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80년대 초반의 가혹한 좌절의 경험에 대한 反芻와反省을 통해 운동의 이념적 내용에 대한全面的인 再檢討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과거 '70년대까지의 소박한 '민주화' 운동의 이념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 지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에 기반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실천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이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학생 운동의 内部에서는 치열한 理念論爭을 통한 觀點定立의 노력이 계속되게 된다.

둘째로, 학생 운동 그 자체의 性格과 限界에

대한全面的인反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진보적인 사회 운동은 이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해 온 대중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는 선도적인 '문제 제기' 정도의 의미 이상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 인식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특히 노동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다양한 형태로 勞動大眾과의結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 시기 동안 내내 이루어졌다. '8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 소위 '위장 취업자들'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공안 당국의 간헐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진 것 이상의 대규모 숫자의 학생들이 경향 각지의 노동 현장으로 '투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로, 학생 운동이 과거와 달리持續的인 社會運動의 출발점이자 그 훈련과 준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운동은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에 몸담고 있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한 운동 양태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그곳을 떠나 社會로 進出한 후에도 각 部門과 領域에서의持續的인活動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의 배출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직접·간접으로 학생 운동에 참여한 경험과 그로부터 습득한 인식이나 조직 연대를 기반으로 이후 여러 부문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部門運動(주로 中間層 운동) 활성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학생 운동 그 자체도 소수의 '운동가'만이 아닌 광범한 '학생 대중'과 결합된 大眾運動의 實踐의 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점차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83년의 소위 '자율화 조치'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 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소규모의 셰틀을 중심으로 하는 비밀결사적 운동가들의 운동이 아니라 각 학과와 단과대학, 나아가서는 대학 전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大眾組織에 기반한 '公開運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대학 내의 학생 운동은 학생회 등과 같은 공개적 자치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의 지역간 혹은 전국적 연대 조직의 건설도 이

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 운동은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日常의 ‘文化’를 형성하기에까지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80년대의 학생 운동을 우리 사회 학생 운동의 식민지 시대 아래의 장구한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에 비추어 대단히 새로운 것으로 평가하기에 족한 조건들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변화 위에서 ’80년대의 학생 운동은 치열한 内部的 摸索의 過程을 통해 가다듬은 이념과 사상 그리고 이론들을 다양하게 大衆化하고 과감하게 實踐하는 가운데 ’80년대의 民主化運動 전반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갔다.

현재 대체로 정리되고 있는 바에 따라 ’80년대 학생 운동의 이념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면, 우리는 먼저 앞에서 말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학생 운동의 이념이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근본적인 질적 변모의 계기를 맞게 됨을 본다. ’80년대 초반과 중반을 거치면서 학생 운동의 내부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논쟁 그리고 실천을 통한 자기 입장의 검증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어떤 본질적인 차이들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이 시기 동안 일반화된 인식은 우리 사회가 중심 자본주의 국가에 從屬된 狀況의 자본주의 사회이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정도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외세 및 군부와 결탁한 少數의 獨占 大資本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 등 基層大衆=民衆의 生活相의 苦痛은 일반화되고 한층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공유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천의 과제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기층대중=민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계급으로서의 勞動者 階級의 운동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의 民主變革의 核心 관점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서는 예컨대 한국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나 주변부자본주의의나, 민중을 이야기할 경우도 우리 상황에서 그것을 노동자를 중심으로 바라 볼 것이나 아니면 보다 폭넓은 민중연합을 주체로 설정해야 하느냐, 노동자가 중심이라 하여도 그 실천의 당면의 과제는 노동자 중심의 치열한 정치 투쟁이 되어야 하

느냐 아니면 아직은 소규모 집단 단위의 학습과 조직에 주력하면서 일상적인 경제적 요구 투쟁과 제도 투쟁에 주력하여야 하느냐 등의 인식의 차이 혹은 ‘전략 전술’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사실은 본질적인 입장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운동과 그 이념의 발전 과정에서 過渡期의 으로 나타났던 部分的 路線의 差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보다 구체적으로는 ’86년 정도를 고비로 하여 소위 ‘民族解放派(NL)’의 問題提起를 계기로 하여 학생 운동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입장의 차이와는 절을 달리는 本質的인 轉換의 계기가 주어진다. 이제는 많은 공개 출판물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이 주장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 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에서의 학생 운동은 물론 사실상 ’70년대 아래의 모든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남한 사회’ 내부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뿐, ‘북한 사회’까지를 한 단위로 한 ‘한반도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되지 못하였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 변혁의 과제를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의 역사적 과제인 통일의 문제, 통일된 민족 국가 건설의 과제의 일환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과제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의 독재 권력이나 독점 자본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내부적 민주화의 과제가 아니라, 그것을 부차적인 과제로 하는 보다 큰 과제로서의 ‘外勞’로부터의 解放, 현 단계에서는 외세의 군사정치적·경제적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自主化’의 과제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이 입장에서는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 변혁은 우선 아직도 우리 사회를 ‘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있는 주된 외세=제국주의로서의 ‘미국’과의 싸움을 주된 것으로 하는 ‘反帝民族解放運動’의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는 결국 분단 상황에서의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이란 미국의 식민지 지배 전략의 과정에서 파생된 부차적 결과에 불과한 것, 간단히 말해서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성격은 ‘殖民地半封建社會’로 규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경우 예컨대 독점 자본이나 군부 독재란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대리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허상’과 맞서 싸우는 동키호테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중심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로서,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적·간접으로 외세 지배의 피해자인 남한 사회의 모든 민중(소수의 매판 세력을 제외한 전 계급과 계층)이 뚫뚫 뭉쳐 단결하여 외세와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 된다.

끝으로,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 변혁의 내용은 우선 ‘反外勢自主化鬪爭’을 통해 民族自主 정권을 수립하고, 경제적으로는 民族 自立 경제를 건설하여,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피를 나눈 민족 공동체로서의 北韓과統一된 民族國家를 수립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민족해방파의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88년에 들어 이러한 경향의 이념이 학생 운동의 주도 이념으로 자리잡고 전국 단위의 학생 연합 조직이 건설되어 강력한 통일된 실천으로 나아가면서, ‘통일 운동’은 사회의 각계 각종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학생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6공화국의 정부는 이를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불순·불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 운동 지도부에 대한 검거와 시위·집회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 저지, 그리고 그러한 이념을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출판물들에 대한 압수와 발행·배포자의 단속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생 운동의 이러한 민족해방파적 관점이 그 내용에 있어 단순히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규정만으로 전부 이해되기 힘든 보다 포괄적인 측면을 갖는 것이라는 점만을 간단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민족해방파적 이념의 주요한 원천의 하나가 북한 사회의 소위 ‘主體思想’이라고 하는 점은 점차 분명해진 듯하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의 경험을 일종의 ‘전국 신화’와도 같은 국가적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승화시키고 있는 주체 사상의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란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시점에서 다시 미제에 의해 강점됨으로써 여전히 제국주의적으로 강점되어 있는 ‘未解放’의 땅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 그동안 북한 사회는 ‘미제로부터의 남한의 해방=조국 해방 과정의 완성’이라고 하는 등식이 수십 년에 걸쳐 일상화된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강력한 주민 동원의 이데올로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입장에서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발전이란 역시 ‘허상’에 불과하고, 남한은 사회 내적으로도 제국주의의 지배 하에서 ‘지주와 매판 자본가’에 의해 모든 민중이 지배당하는 사실상의 殖民地半封建 사회에 불과하다. 그동안 민족해방파의 입장은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의 남한 사회 인식과 매우 긴밀한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서 유통되는 교육이나 선전의 자료들이 북한의 입장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과 입장(혹은 사상)이 청년 학생들에 의해 광범하게(이것은 사실이다) 수용될 수 있었던 우리 内部의 ‘根據’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 내용(핵을 포함한 군사력의 배치, 작전권의 장악 등의 ‘直接支配的’ 요소들 등), ‘光州’의 경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남한의 독재 정권에 대한 적·간접의 엄청난 영향력 행사, ’8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수입 개방 요구와 같은 경제 종속적 관계의 노경, 정통성 없는 남한 정권의 일관된 대미 의존적 관계 등등이 그것이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예컨대 ‘농지 개혁’ 이후에도 다시 광범하게 확대된 농촌에서의 지주—소작 관계나 산업 생산보다는 상업적인 이윤이나 토지 투기 등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본의 행태 같은 것이 우리 사회의 ‘半封建性’의 지표로 지적되기도 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낡은 관념이나 가치관,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지배 의식 등도 소위 ‘상부 구조’의 반봉건성의 지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의 지표들은 사실상 그 자체가 남한 사회를 ‘식민지’ 혹은 ‘반봉건’의 사회로

규정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에는 그것을 反證하는 指標들 역시 열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미 사회 구성원의 과반이 균대적인 임금 노동자로 자리잡고 있는 계급 관계에 있어서의 진보성=자본주의성, 소수의 독점 대자본이 사회적 생산의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력한 '독점성', 경제적 종속의 상황 속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양적인 성과들, 전후 제3세계 국가들 일반이 그러했듯이 경제적 종속 속에서도 제국주의에 의한 '직접적 지배=식민지화'의 역사는 일단 청산되고 특립된 국가로서의 정치 주권의 일정한 행사를 보여 온 점 등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파의 입장이 학생 운동 내의 가장 강력한 조류가 되기에 이르른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해보는 테 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역시 '分斷'이라고 하는 우리의 '民族的狀況'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분단의 조건은 우리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적' 상황, 즉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상황은 분단까지의 과거의 역사에 고착되어 있음으로써 社會構成員들의 '意識'의 상황을極端的으로跛行化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었다. 정치 권력에 의한 분단 상황의 '이용'은 권력 기반의 등요 시기마다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이것이 일반 대중의 생활 깊숙이까지 침투된 분단 의식과 상승 작용하면서 '반공' 이외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이념들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다. 이 속에서 민족적 정서와 감성, 통일에의 열망과 의지 등은 대중들의 의식 속에 깊이 침잠되어 일상의 생활 과정 속에서 확인되고 일깨워지며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표현을 염두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역압적 정치권력의 이완기마다 격렬한 형태로 표출하는 민족주의적 열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본다. 이 점은 예컨대 같은 분단 국가 중 '70년대 이래 '동방 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민족적 과제의 해소를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이념적 노

력을 기울여 온 독일과 같은 나라의 자극적 규정하고 현실주의적인 민족 문제에의 접근과 대비할 때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최근의 학생 운동에서의 급격한 인식 변화의 내용을 성급하게 규정하고 나아가 단죄하려 하는 일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너무도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일단 학생 운동 내에서의 소위 민족해방파적 관점의一面性과 偏向性(혹은 非科學性)을 지적하면서도 가급적 그것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未解決의 民族問題에 대한 청년학생층의 主體的接近의 過程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가피한' 과도적 이념 상황으로 바라볼 필요를 느낀다.

3. 統一運動의 展開過程과 問題點

학생 운동이 본격적으로 '통일 운동'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미 수 년에 걸쳐 學生運動 内部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理念的內容의 變化와 그에 따른 部分的 實踐의 도습이 있었음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길게 보면 '광주' 이후부터 학생 운동의 내부에서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결집들이 미국이라는 強力한 外勢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다. 예컨대 '광주' 직후에 있었던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그보다는 훨씬 충격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경향의 표출이었다. 이 두 사건은 학생 운동 내부에서는 조응한 반향을 일으키며 그 의미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 대중의 의식 상황은 아직 '반미 의식'이나 '반제 의식'이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이 물론이다. '85년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은 학생 운동 내부에서 진행되던 인식의 변화가 드디어 일정하게 組織的 實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光州'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고 그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 수입 요구를 규탄하는 정도의 지금으로서는 이미 常識化된 정도의 要求를 내세우며 미 문화원을 점거하였다가 협상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산·연행된 학생들의 동향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축발했던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식 해명의 내용과 상관 없이 광범위하게 ‘광주’에서의 미국의 責任論이 받아 들여지고, 당시의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수입 개방 요구에 대한 반감과 결부하여 폭넓게 初步的인 형태의 ‘反美意識’이 형성되어 가게 된다.

학생 운동의 내부에서 진행된 변화는 ’86, ’87년을 경과하면서 民族解放派의 立場의 학생 운동권이 학생들의 대중 조직인 각 대학의 학생회와 그 연대 조직을 장악하는 가운데 ’88년의 폭발적인 ‘통일 운동’의 추동력이 되었다. ’88년 6월에서 8월 사이의 통일 운동은 남북 학생회 담을 둘러싼 학생들과 공권력 간의 공방전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규모의 자체 등원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 대중들의 열기와 참여를 유도해내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87년의 6월 항쟁과 7, 8월의 노동 운동에서 나타났던 사회 각 계급과 계층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통일 운동에 대해 비교적 냉담하였거나 조심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올림픽 기간 중 학생 운동은 올림픽이 북한의 참여 속에 열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분단된 ‘두 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행사가 될 뿐이라는 인식에서 ‘분단 올림픽’의 거부와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주최’를 요구하였지만, 이것이 일반 대중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올림픽 기간 중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발적인 계기들을 매개로 대중들의 ‘반미 감정’이 광범하게 드러났다는 점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대거 참여와 그들에 대한 여론의 호기심에 의해 증폭된 ‘共產主義 알레르기’의 신속한 弛緩現狀이었다. 물론 이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진행된 학생들의 반미 운동 및 미국의 대외 정책의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잠재적 반미 의식의 확산,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정체 변화의 전조로서의 세심한 대국민 홍보전(예술단의 파견 등)의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방 정책’을 염두에 두 정부 당국의 일정한 정체적 유도와 이에 편승한 언론 기관의 선정주의적 보도 등이 맞물려 진행된 것이었음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國民들의 日常的인 意識 속에서는 아직은 感性的 수준에서의 反美意識 정도를 크게 넘어서는 본격적인 脫이데올로기적理念, 혹은 分斷意識을 넘어서는 統一指向的信念의 壓大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학생들의 통일 운동은 아직은 대중적 기반과는 상당히 유리된 ‘急進的’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89년에 이르러서도 학생 운동은 여전히 통일 운동으로 치닫고 있었다. 평양에서 개최된 8월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둘러싼 학생 운동과 공권력과의 대립은 급기야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양의 방북을 계기로 소위 ‘公安政局’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정부는 일체의 親北韓的 경향을 保安法으로 다스리면서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 하의 남북교류, 그리고 그보다는 더욱 정력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과 대북방 개방화라는 일견 상호 모순된 양면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우선 학생 운동의 급진적인 통일 운동은 한편으로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즉 그동안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차단되어 있었던 北韓 사회의 實情을 多樣한 방식으로 紹介하고 그를 통해 잊혀져 가고 있었던 民族的 同質感을 回復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獨自的 南北交流에 의한 통일 운동의 基盤造成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었다. 전자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정부의 북방 정책과 서로 맞물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있는 일정한 성과를 낳았던 측면이 있으나,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한편으로 대중의 요구나 정서와는 유리된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학생층만의 운동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으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80년대 학생 운동의 변화, 즉 一般大眾과 결합한 社會運動으로서의 學生運動이라는 ’80년대의 ‘발전’의 측면이 統一運動에 이르러 다시 後退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는 특히 ‘공안정국’의 이면에서 농민, 도시 빈민, 교사, 그

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民主的 權利爭取와 生存權 確保를 위한 움직임들이 다시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었던 와중에 학생 운동은 이와 유리된 統一運動에 전적으로 매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批判되고 있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一般大衆들 사이에서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었던 民主化에의 要求, 즉 ‘광주’ 문제의 해결과 ‘5공 청산’을 매개로 한 政治權力의 民主的 改編에의 요구와도 相值되고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노정이 바로 학생 운동 내의 소위 民族解放派의 立場과 觀點이 과연 우리 社會의 客觀的 位相과 課題의 解消를 위해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4. 展望：民主化運動과 統一運動

그동안 학생 운동이 통일 운동으로 치달으면서 드러낸 문제점들은 이미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課題의 複合性의 反映이기도 하다. 크게 보면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社會의 民主化라고 하는 과제와 分斷의 克服으로서의 統一이라고 하는 과제와의 복잡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학생 운동 내에서의 서로 편향된 현실 인식들은 이 두 중첩적 과제를 다소간 서로 일련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빛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이 一般大衆의 意識 상황이나 大衆運動의 전개와 遊離된 학생 운동의 지나친 獨走와 결합됨으로써 이 두 과제가 상호 긴밀히 연관된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이 실천 속에서 겹중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民主화와 統一의 문제는 서로 어떤 ‘우선 순위’를 갖는 분리된 과제가 아님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反民主・反統一의 사회 세력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인식한다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이 두 과제와 주체의 결합의 문제는 당연히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大衆의 社會運動과의 관계 속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80년대 후반의 학생 운동은 急進의 統一運動으로 치닫는 가운데 그것이 ’80년대 중반까지 어렵게 확인한 가장 중요한 원칙, 즉 社會運動은 반드시 大衆에 基礎하여 大衆과 함께 나아

가는 것이라는 原則과는 크게 遊離된 측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통일 운동이 학생층에 의해 출발 주도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학생 운동보다는 여타의 社會運動의 未成熟・未發展을 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노동 운동의 급성장은 이에 대해 하나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勞動運動은 전반적으로 初步的인 段階의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와 경제적 생존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이 아니다. 學生運動은 계급・계층에 기반한 지속적 사회 운동은 아니며, 여타 사회 운동의 미발전이라는 過渡期的 狀況 속에서 앞장선 先導的 問題提起가 그것의 주된 역할이자 그 ‘해결’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학생 운동의 문제점들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된 政府의 北方政策은 어떤 점에서는 분명 대단히 진보적인 측면들을 보이면서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치밀한 판단과 세심한 준비 작업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構成員 다수의 合意와 생활상의 要求에 부응하는 형태로,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民族의 再統一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다. 국내적으로는 국민 대중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경제적으로 억누르면서 달라진 국제 경제 및 국제 정치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려는 支配層 為主의 북방 정책・대북 정책이라면, 그것의 추진 과정과 결과는 능히 짚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의 통일 정책과는 다른 次元에서의 統一運動은 반드시 要求되는 것이며, 앞으로 그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문제에 대한 학생층의 문제 제기와 주체적 통일 운동의 추진 노력은 이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問題點들을 批判하고 統一運動의 올바른 전개를摸索하는 일 역시도 따라서 학생 운동단의 과제일 수는 없다. 이를 우리 社會全體의 課題로 끌어들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